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26.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종사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서 2016. 11. 3. ○○지방법원으로부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 이 사실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과장은 2017. 8. 1. ‘2017년 7월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제85조 및 제87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종사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문통지 하였고 2017. 9.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고발자가 택시를 타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농간하며 대화를 이끌어 내고 대화내용을 약점으로 잡아 112상황실에 강제추행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등 계획된 범죄이며, ② 고발자가 청구인에게 한 300만 원 요구에 입금이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검사에게 얘기하고 검사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발자가 만든 허위 거짓진술을 사실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처벌을 요하는 서류 및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가 오판하게 한 점, ③ 국선변호사가 항소하라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하지 못한 점, ④ 부채가 많고 택시운전이 청구인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인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선처해 달라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3.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및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5조, 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4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서 청구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탄 승객인 피해자 ○○○(여, 51세)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6. 11. 3. ○○지방법원으로부터 수감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2017. 8. 1. 인천광역시 ○○○○과장은 청구인을

‘2017년 7월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자(죄명 : 강제추행)’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통지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7.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제  
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법시행령 제3조  
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법」 제298조(강제추  
행)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그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죄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7조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제1항제37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6. 11.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및 제87조가 규정하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규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범죄자이고 청구인 본인은 무죄인데 검사의 업무소홀과 판사의 오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바 너무 억울하므로 구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검찰 조사 및 법원의 처분이 확정된 지금에 와서 피의사실을 부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논외로 하기로 하며, 더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통해 청구인에게 충분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동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시운전종사자격 취소는 행정기관의 재량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겪게 되는 생계 곤란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